



[생활속 블록체인]
삼성SDS
'넥스레저'로
플랫폼 구축
03

삼성바이오 이은 금감원의 독선 제2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보증 〈NH코린도증권〉 5년전 '허용' 이제와서 '제재'

금감원, 제재심의위 안건상정 논의
업계 "감독정책 일관성 있어야"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NH투자증권 까지 해외법인 신용공여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문제를 두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릴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안이 확정되면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겨져 최종 판결을 받게 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지난 2014년 말 인도네시아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현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2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을 문제삼고 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종합투자금융업자는 지분 30% 이상인 해외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의 안건에 자본시장법 내 두 개의 법안이 충돌하면서 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문제삼자 NH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34조를 들고 나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종합투자금융업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NH코린도증권에 지급보증을 설 당시 NH투자증권의 지분율은 60%였기 때문에 당시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앞서 베트남 법인에 3500만달러(397억원)를 대출해 줬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및 과징금 45억원을 부과받은 한국투자증권 역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의 규제가 지나치게 과거에 얹매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외법인에 대한 지급 보증은 가능 토록 했다. 증권사의 해외 시장 진출에 과도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계는 지급 보증뿐만 아니라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자체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NH투자증권은 유상증자 등으로 NH코린도증권의 몸집을 키운 덕분에 매년 꾸준히 현지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 2018년 NH코린도증권 경상이익은 전년보다 18억원 증가한 37억원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금감원은 법 개정 전의 2014년 사건을 들고 나오며 친불을 끼쳤었다. 또 NH투자증권은 2014년 당시 법 충돌 등의 문제로 금감원에 해당 사항을 논의해 자본시장법상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해외 법인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다른 증권사도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된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위법하다고 하는 금융당국의 말을 어떻게 믿고 해외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며 “제재를 받으면 해외법인에서의 평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의 해외진출은 수의 창출 뿐만 아니라 해외의 유망한 투자상품을 국내 투자자와 연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면서 “해외법인 신용 문제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의 견의가 많다”고 말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학교 유해물질 대책 손 놓고있는 정부

김현아 의원실, 교육부 자료 검토

미세먼지 대비 시설기준 내용 없고
시설기준 타당성 검토 5년째 안해

미세먼지 유입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에서도 유해환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학교운영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교육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20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3년마다 시설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한 이력이 전무했다. 또 '학교 건물(교사·校舍)'이나 체육장 등 시설기준에 대한 실질적 개정·조치도 지난 2007년 이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교육부가 시설 개정에 대해 10년 넘도록 답습한 것이다. 사실상 학교를 유해물질에 방지했다는 평가다.

실제 현행 학교환경보건법의 경우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미세먼지를 대비할 만한 시설기준 마련 등 내용은 없다. '오염물질 관리기준'만 명시할 뿐이다. 학부모·학생 사이에서는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교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면적기준 대비 운영규정만 나와 있을 뿐 시설에 대한 구체적 대안 법안은 없는 것이다.

다만 이 법 3조 1항 3호는 공기 질 등 의 유지·관리기준을 명시하는데, 모든 교실에 대해 ▲m³당 미세먼지(직경 2.5μm 이하 먼지) 기준은 35㎍ 이하 ▲이 산화탄소 기준은 1000ppm 이하 ▲이

당 총부유세균 800CFU 이하 등으로 정했다. 법안에 기록된 오염물질 항목은 총 12개로, 학교가 사실상 모든 교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또 교내 석면의 경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석면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cc당 0.01개를 유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학교 전체면적당 석면 제거율은 23.6%였다. 잔여 석면이 76.4%에 달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이지만, 김 의원실은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조4000억원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완료될진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석면을 제거하더라도 향후 관리규정을 명시한 지표 자체도 없는 실정이다. 애초 학교 건설기준에 석면 비율을 제한하거나, 석면 성분 자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석대성 기자 bigstar@



文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가스화학 플랜트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현지시간) 키안리

가스화학플랜트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투르크멘바시 키안리 가스화학 플랜트는 잠실종합운동장의 3배 규모로 중앙아시아 최대이자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화학 플랜트이다.

/연합뉴스

쓰레기소각장 주변환경 '이상無' 주민들 인식은 "심각하게 오염"

강남·노원·양천 서울시내 3곳
자원회수시설 주민건강영향 조사

평가하는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는 주민들이 추천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서 실시했다.

환경공해연구소는 지난해 3~12월 자원회수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혈중 납, 카드뮴, 수은 농도를 측정했다.

쓰레기소각장 근처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들의 중금속 인체 노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조사는 강남·노원·양천구 소각장 영향 지역 내(반경 300m 이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민 2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들의 혈중 납 농도는 평균 14.34µg/l로 세계보건기구의 일반인 노출 수준 상한값인 100µg/l보다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은 15.26µg/l, 노원은 13.15µg/l, 양천은 15.19µg/l로 나타났다.

〈3면에 계속〉

/김현정 기자 hjk1@

〈연구 대상자의 혈중 중금속 농도〉

항목	WHO 일반인 노출 수준 상한값	전체 평균 (n=252명)	강남구 평균 (n=73명)	노원구 평균 (n=108명)	양천구 평균 (n=71명)
납	100µg/l	14.34µg/l	15.26µg/l	13.15µg/l	15.19µg/l
카드뮴	5µg/l	1.17µg/l	1.23µg/l	1.06µg/l	1.28µg/l
수은	5µg/l	1.17µg/l	1.27µg/l	1.28µg/l	0.88µg/l

/자료=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서울시